

김태년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립뉴스

민주 원내대책회의...수도권 집중 해소·국가 균형발전 '과제' '여야 합의하면 개헌 안해도 가능...현재 판단, 시대 따라 변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등 국회 등을 지방으로 옮겨 국가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했

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국민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현재의 판단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고 또, 재정립되어 왔다”면서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도 많다. 관습 헌법을 앞세운 현재의 판결은 그 당시인 2004년에도 논란이 많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

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현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우려야 한계가 없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수도권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며 찬성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여주니 눈물 깊게 감사하다”며 “지난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됐는데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꺼내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성난 민심을 돌려보려고 꺼낸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현재에서 위험 결정이 낫던 문제다. 위험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호영 “부동산 실패 김현미 경질해야” 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원순 의혹’ 특위 제안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 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면서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 낼 힘은 결국 국민 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붓고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면서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론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

대 정책이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고 소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라면 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뽀주기 판결”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방해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경수 대법원장 부끄러운 줄 알라”며 사법부 편향성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靑, 김경 수사권 조정 시행안 마련

중대사건 수사, 법무장관 승인 받아야

청와대가 최근 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이런 잠정안을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시행령 잠정안에는 검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미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하 공직자의 범죄나 3000만원 미만 뇌물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게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

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협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대상이나 직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가 마련한 이 시행령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현재보다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최종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민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공천 여부 커지는 논란

당헌 당규 명분, 수도·제2도시 수장 선출 실리 놓고 의견분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5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공천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면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오거돈 사건을 무공천 사안인 ‘부정부패’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과거에도 민주당은 성추문으로 사퇴

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공석에 현 양승조 지사를 공천한 전례도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전날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에서는 보궐선거로 뽑히는 시장의 임기가 불과 1년이라는 점에서 무공천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성권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헌을 고치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은 쪼잔하게 보일 수 있다”며 “일년짜리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깨끗이 사과하는 대신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 맞다”고 동조했다.

부산시장위원장이던 전재수 의원 역시 “내년 선거에서 이거도 임기가 8개월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부산시장은 보전 시장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무공천에 대한 지역 당원들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는 상징성 탓에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도과 제2도시의 수장을 다시 뽑는 건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너무 명분론에만 매달리기에선 워낙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공천까지의 시간이 있는 만큼 미리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테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먼저 끄집어내 당내에서 활기활부하는 게 현명한 일인가”라며 이재명 지사를 우회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상혁·김창룡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방송위원장·경찰청장 후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직업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경찰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 | |
|--|--|
| <p>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p> <p>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p> <p>대출금리 연 3.1%~8.15% (고정금리)</p> | <p>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p> <p>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p> <p>※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p> <p>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p> |
|--|--|

| | | | |
|-----------------------------|-----------------------------|-----------------------------|------------------------------|
| <p>문흥지점 266-4150</p> | <p>양산지점 573-4150</p> | <p>운암지점 528-4150</p> | <p>운암산지점 513-4150</p> |
| <p>매곡지점 572-4150</p> | | <p>첨단지점 576-4150</p> | |